

# “인구감소지역 지원으로 지역 인구유출 막아야”

###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위기 대응 계획수립 등 심의 국가 위원회 두도록 규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해 인구 활력지원협약 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자원을 위해 일자리·창업, 주거 및 정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1호 대표발의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 “군산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식 개선을”

### 이명연 도의원 “2곳은 미설치, 1년간 촬영건수 23거 분” 김만기 도의원, 복지부 의견조치에 반대 입장 피력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9일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8월 많은 우려폭발을 겪으며,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이 이뤄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수술을 함께 진행했던 의료인들의 제보가 아닌 이상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실제 수술실 내에서 유령·대리수술, 영업사원이나 원무과 직원 등이 수술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마취 상태의 환자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인종차별, 집단 따돌림,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이후 6년 동안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명연 도의원



김만기 도의원

전북도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규정을 신설해 도내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설치를 완료해 운영중에 있지만, 최근 군산의료원의 경우 설치 및 운영과 관련,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먼저, 이명연 위원장(전주 11)은 “지금껏 전북도는 의료원 내 모든 수술실에 CCTV설치를 완료했다고 의회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지난 7월 의회에 제출된 군산의료원의 CCTV 설치 및 운영 실적을 보면, 총 수술실은 6개실이지만, CCTV 설치는 4개소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군산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여간 촬영한 수술실 촬영 건수가 단 23건으로 이는 해당기간 총 수술 건인 1,452건의 1.6%에 불과하다”며 “이는 비슷한 기간 남원의료원이 총 수술건수 412건, 총 촬영건수 373건(촬영비율 91%)과 비교해도 군산의료원의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김만기 의원(고창 2)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전북도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들을 대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의견조회 내용을 보더라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견해차이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남원의료원의 경우 CCTV 설치에 대해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군산의료원의 경우 CCTV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각 의료원의 입장차이 수술실 CCTV 촬영 건수의 차이로 나타난 것 아닌가란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군산의료원 원장님께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앞으로 군산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의사봉 두드리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동일 업무 정규·비정규 경력인정 차별 개선을”

### 이병철 도의원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전주)은 9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업무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력인정 차별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인정기준에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100% 인정하는 반면,



특히, 이병철 의원은 “도내 15개 출

연기관은 경력인정기준이 천차만별이고, 동일업무경력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기준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불구하고, 도 관련기관(경영평가팀)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15개 출연기관의 담당자들이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통일된 경력인정기준표를 마련해 도에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 체계화해야”

### 조동용 도의원 “시·군별 편차 심각… 관리 부실 재난관리기금 관리·집행계획 장기적으로 마련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B)은 9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자원’의 부실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의 수습 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으로 도내에는 장비 1만6,309점, 자재 11만1,336점, 인력 18만9,571명 등이 있다.

하지만, 시·군별로 보유한 재난관리 자원의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것이 조 의원이 주장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읍시는 5만9,722



는 고작 17명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매달 13일 재난관리자원 현황화 날을 지정해 재난관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현재 상태 등을

확인·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동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난발생시 장비, 자재 등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지원·활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지난해 코로나 19로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소진한 만큼, 앞으로는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과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 “수강료 결제방식 다양화 대안 강구”

#### 한복위, 여성교육문화센터 등 찾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9일 여성교육문화센터,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을 대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오 의원(익산)은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중 광역취급 상담사 운영비가 시·군에 따라 상이한 이유를 묻고 11월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지적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그는 2021년에

실시한 교육사업의 세부실적을 살펴보면, 1기 또는 2기에는 개설됐으나 3기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중 지속적으로 개설해 교육이 실시돼야 할 과목들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한 교육생의 사후 관리 방안 등에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비례)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수강료의 카드결제 방식이 되지 않는 이유를 지적하고, 수강료의 요구에 따라 결제방식 다양화를 위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 행자위, 감사관 찾아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해달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9일 제38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B)은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축하하고, 제한된 인력과 환경에서도 노력해 좋은 성과를 거둔 감사관과 부서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20곳 중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도내 공공기관 총사저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내 공직 총사저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지난 3년간 1인 수의계약이 8만여건에 달하는 등 이는 시·군에서 국·도비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분할 발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시·군 감사 시 표본 조사를 통해 공사나 용역 발주에 문제가 있는지 꼼꼼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문건위, “불법행위 단속 타시·도 사례 참고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9일 제386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을 시작으로 본격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오영근 의원(전주)은 최근 업무 확대를 위해 과거 신설된 특별사법경찰과 단속실적과 관련해 “식 품위생 감염병 예방, 환경 분야 단속 건수는 증가했지만 축산물 원산지 청소년보호 등의 다른 분야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일부 분야에만 치중해 나머지 분야는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분야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참고해 수사 분야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한욱 의원(전주10)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른 공무원 1인당 방독면 1개 확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질타하며 “비상사태에서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올해까지 방독면 확보를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민방위 교육 내실화

### 최영규 도의원, “적극 홍보 대원 전원이 이수토록 해야”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은 9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교육 내실화,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강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 및 안전관리 철저 등을 주문했다.

먼저, 코로나 19로 지난해부터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질의했다.

최 의원은 “민방위 교육은 각종 민방위 사태와 재난 발생시 우리 가족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민방위대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내 108개 지구에 1,2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의 경우 2021년, 2022년 사업이 완료될 사업지구 13개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해 과연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영규 의원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재해 대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민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박희자 도의원, 올해 민주

### 지방의회 우수조례 포상

전북도의회 박희자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문 포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전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는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버너스 개념의 협치를 뛰어넘는 학교현장 속의 협치가 이뤄지도록 구성했다. /유호상 기자

